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 ...세부담 크게 줄어”

추경호 부총리,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
 올해 공시가 -18.6%...2005년 이후 최대폭 감소
 보유세·건강보험 등 부담 감소...근로장려금 수혜 ↑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내렸다. 역대 최대폭 감소로 지난해 주택가격 급락 요인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고 기초생활,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아파트 1206만

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 총 1486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해 국민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조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각종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월소득 환산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전남도 솔라시도 개발 탄력

전남도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조성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과 주택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을 지난 20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한 해남·영암·태안 3곳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에 한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 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전남도가 보성그룹의 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과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분양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화 진행 예정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지역에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지역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을 종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에 대한 주택 세제특례 개선을 당·정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날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후속 법령도 개정되는 결실을 봤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주택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세제 혜택에 따라 사업 추진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지방인구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마중물 삼아 솔라시도를 관광·레저·산업 융복합의 세계적 미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했으며,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 관광 홍보관 부스 둘러보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서울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시전 2 서울페스티벌 부대행사인 전남 관광 홍보관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광주·전남 농민단체 “민생 외면한 윤 정부와 싸우겠다” 농정 규탄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거부 등 농정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2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민중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쌀값 폭락,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에 빠진 농민들

을 외면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며 농산물 수입경로 다변화라는 말도 되지 않는 정책으로 입안했고, ‘물가 폭등’ 대책으로 농산물을 저관세·무관세 수입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요구는 무시했고 ‘자동시장격리제’가 포함된 개정안마저 거부권을 운운하며 막아섰다”고 비판했다.
 또 “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꺼내들어 공안 탄압을 가하고 식민침탈의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강제징용 배상 책임 면죄부를 줬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금·토요일 쉽다 홈페이지 i-honam.com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